

민주 “다음 영수회담엔 의제 정하고 성과 내야”

박성준 “사진 찍기용 절대 안 돼”
임오경 “여야정협의체 가능성 0”
진성준 “尹, 언론장악 없다 말해”

전날 첫 영수회담에 대해 “아쉽고 답답했다”는 평가를 내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앞으로 2차 회담에는 의제를 정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다음 영수회담에서는 또 손만 잡고 약속하고 끝날 건가. 그래서 국민들이 아니라고 할 것 같다”며 “이번에 영수회담을 한번 우

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의제라든가 국정기조 전환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영수회담이 왜 열렸고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첫 영수회담과 관련, “(윤 대통령의 회담 제안은) 국면 전환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는 있었다”면서 “빈 수레, 사진 찍기용은 절대 안 된다. 만남의 자리만이 아니라 영수회담은 답을

내는 자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건가 실천하는 자리고 실행의 자리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영수회담에서 언급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제안이 오면 당연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생 경제를 위해 앞장서겠다”면서도, “실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임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안은 환

영하는 입장이지만, 알다시피 언행일치가 계속해서 되지 않는 모습을 2년 이상 지켜봤다”며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이 85% 정도 말씀하시고 (이재명 대표가) 15% 정도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영수회담인가 싶다”고 꼬집었다.

전날 회담에 배석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언론을 장악하거나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방송심의 문제 등을 언

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난 잘 몰랐다’,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 하는 일 아니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언론을 쥐려면 그 방법을 자기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했다).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초기에 90% 지지율을 기록한다고 한들 끝까지 갈 수도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야4당, 이태원특별법 재의결 촉구…“5월 국회서 통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새진보연합·진보당 등 야4당은 30일 21대 국회 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의결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용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어떻게든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의장까지 직접 중재에 나서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통과시킨 법”이라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기어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 등은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이야말로 사회통합의 길”이라면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를 향해서도 “21대 국회 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첫 영수회담을 끝낸 민주당은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수회담을 계기로 특검 및 특별법 처리할 명분이 생긴 만큼,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며 정국 주도권 잡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4·10총선 민심에서 나타난 협치와 ‘정치 복원’, ‘국정기조 전환’과도 맞닿아 있다는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규정대로, 국민 명령대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국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여당을 정조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해병대원 순직 외압 관련’ 수사 촉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해병대원 순직 외압’ 관련 수사 촉구서를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

광주시의회 ‘디자인비엔날레 업무 이관’ 반발

“의회 소통 없이 발표, 경시”
시 “의견수렴 후 수정 가능”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던 디자인비엔날레 업무를 다시 광주비엔날레재단으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광주시의원들이 ‘의회 경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심철의 의원은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향해 “강 시장이 디자인비엔날레 업무 이관을 언론에 먼저 발표한 것은 의회를 거스기 역할로 경시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시장이 한다고하면 다 하는 것인가. (시장) 나를 따르라고 해서 다 갈 수 있

는 것은 아니다”며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해명자료를 내든지 아니라는 공식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도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질의는 단순히 의원들뿐만 아니라 현장과 외부 관계자들의 말을 풀어서 한 것이다”고 말했다.

심창욱 의원 역시 “전에 용역의뢰를 하는 걸 보면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있다. 최고 결정권자가 방향성을 제시하면 직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의 반발에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강 시장이 디자인비엔날레 업무 이관을 언급한 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여러 단체의 찬반 의견을 듣고 수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목적은 산업디자인과 지역 고유 전통디자인을 발전시키는 것이지만, 진흥원이 디자인비엔날레를 진행하면서 고유 목적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디자인산업에 집중하기 위해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을 특화하는 게 광주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년 간격으로 지난 2005년 처음 시작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1회부터 5회까지는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주관했으나, 이후 2015년 6회부터 지난해 10회까지 디자인진흥원이 운영 중이다.

김은지 기자

박미정 시의원 “서구, 생활지원금 지급 누락”

광주 서구의 안이한 행정으로 87명의 장애인이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사진) 의원은 3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이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87명을 누락해 총 74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 5년 완성으로 5322만원을 제외한 2124만원을 중증장애인들이 지급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광주시가 장애인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자 누락 방지를 위해 2021년 4월 서구 등 5개 자치구에 공문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전수조사 이후에도 관련 담당자들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

박미정 의원은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보 접근성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광주시도 전역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지원금 교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실태점검 등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최지현 시의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해야”

광주시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사진)은 30일 제324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올바른 의료 이용 및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 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의료급여관리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급권자의 건강을 관리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이용하도



록 유도해야 한다”며 “다빈도 외래이용자를 중심으로 건강상담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의료급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와 정부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광주시의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나광국 도의원,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사진)이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나 의원은 지역 쌀 소비 촉진과 학생 결식률 감소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관련 예산을 마련한 활동을 인정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단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아침식사 먹기 캠페인을 몸소 실천하는 등 시민·공직사회의 실질적

인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낸 거버넌스 구현을 높이 평가했다.

나 의원은 “쌀값 폭락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농도(農道) 전남의 도의원으로서 할 일을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아침먹기 캠페인과 지역 쌀 소비 증대를 위한 활동을 큰 상으로 보답받게 돼 영광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2년 연속 상을 받게 돼 매우 뜻깊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



이겠다”며 “항상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사)거버넌스센터에서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에서 후원, 거버넌스 구현과 성과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곽지혜 기자